

외자·기업 유치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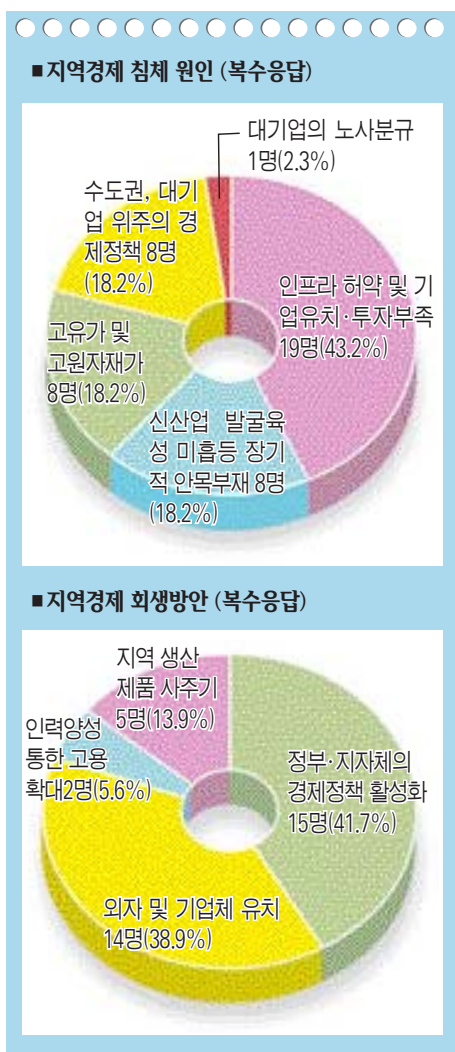
■ 광주·전남 경제전문가 30인 설문 ... 지역경제 진단과 회생방안

수도권·대기업 중심 정책 지속땐 벼랑 끝 지역경제 탈출구 안보여

올해 3·4분기를 넘긴 광주·전남지역 체감경기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인식은 비관적이었다. 30명 가운데 14명(46.6%)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응답했고, '최악'이라고 답한 사람도 8명(26.6%)에 달했다. 향후 '희망'을 예기한 응답자는 7명(23.3%)에 불과했다. 또 이들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원인으로 'SOC(사회간접자본) 등 경제 인프라 미흡과 기업유치·투자 부족'(19명·4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수도권·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인재 부족·신산업 발굴육성 미흡',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각 8명·18.2%) 등을 꼽고 두들기며 '대기업의 노사분규'(1명·2.3%)는 소수의견에 그쳤다.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귀책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중앙정부 18명(46.21%) ▲광주시와 전남도



영 운전자금 구하기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에 나서 납품 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주고, 지자체 등도 중기제품 판로확대를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 정부정책 변화'(15명·46.9%)를 비롯해 '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11명·34.4%) 외에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 공급규제'와 '재건축 완화 등 건축규제 완화'(각 3명·9.4%) 등이 시급한 대책으로 거론됐다.

특히 수도권 위주로 진행된 9.1 세계계편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역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방에 또다시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응답자들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지역 생산 제품 사주기 미분양 주택 해소 긴급요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광주시의 경우 '보통'(11명·39.3%), '만족'(7명·25.0%), '미흡'(6명·21.4%) 순이었고 전남은 '보통'(12명·40.0%), '만족'(8명·26.7%)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는 부품소재산업(14명·37.8%), 광산업(12명·32.4%), 자동차산업(6명·16.2%), 생활가전산업(5명·13.5%) 순이었다.

또 전남도는 관광·서비스산업(14명·37.8%), 조선산업(12명·32.4%), 친환경농업(10명·27.1%), 생물관산업(1명·2.7%) 등을 꼽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자금난 中 회생 급선무 금리 내리고 대출 늘려야

등 지자체 10명(25.6%) ▲기업인 5명(12.8%) ▲지역 정치권 4명(10.31%) ▲지역민 2명(5.1%) 순으로 집계됐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정책 활성화'(15명·38.9%)를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에서 지방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외자 및 기업체 유치'(14명·38.9%), '지역 제품 사주기 운동 등을 통한 지역기업 육성'(5명·13.9%),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통한 고용확대'(2명·5.6%) 등이 뒤를 이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자금난 및 원자재난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과의 불화 ▲소비심리 침체에 따른 판로축소 ▲환율불안 등에 따른 수출예로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금융권의 융자금 회수, 수년 전부터 지속돼온 국제 원자재가의 고공행진 등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체의 경우 추가 설비투자는 커

“노사안정 등 투자환경 조성 서둘러야”

■ 기업유치 하려면 ...

광주·전남의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 유치 등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또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선 SOC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내수 및 건설부문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30명의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광주·전남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묻는 주관식 설문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 방안 모색 등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중앙 정부에만 의

존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내 경제 주체들의 역할을 모으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지역 경제 위축이 생산업체의 내수둔화 및 건설부문 침체 등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내수 및 건설부문 활성화와 여부는 지역내 산업 생산 규모 확충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 확대 및 고용창출 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소기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선 정부의 환율 정책과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중소기업체에 대한 '문턱'을 대폭 낮추는 한편, 정부도 금융지원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부문의 경우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지방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은 또 지방 미분양 대책 등 정부의 차별화된 부동산정책 마련 및 SOC 확충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지역 특화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광주·전남의 특성을 고려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전략이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창업 활성화 ▲하남산단 공동화에 따른 대책 마련 ▲우수인력 양성 및 역의 유출 방지 노력 ▲지역 생산제품 사주기 등 판로 확대 ▲광주·전남의 연계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꼽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김신기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 광주·전남의 경제 도약을 위해 선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노사안정과 SOC확충 등도 지역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협력이 될 것이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시설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적정 납품단가 설정 등 상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구수희 (롯데광주점 대표) = 외자분 및 기업유치,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김규룡 (대한건설협회 전남도 회장) =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선 지방의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중소기업체들의 활로를 찾기 위한 지자체의 SOC 확충 노력도 시급하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정책부장) =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 경제 주체들도 자생력을 갖춘 사업을 육성하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김병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 = 연관산업이 부족한 광산업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 향후 하남산단의 공동화에 따른 대책과 기업유치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



▲김보곤 (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 회장) =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건설경기를 부양시켜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김상선 (금호산업 대표) = 경제 인프라 뿐만 아니라 교육·노동·복지·지역정서 등 모든 분야가 개선되고 안정돼야 기업들이 찾아온다.



▲김진봉 (광주광산업대표자협의회 회장) = 우수 인력의 역의 유출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고급 인력 양성과 함께 다양한 인력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창수 (현성테크노 대표) = 한울불안 때문에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 환율안정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보가 시급하다.



▲김현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 = 지자체가 고용 창출, 여성기업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앞장서 줄 것을 건의한다.



▲김호남 (근화건설 대표) = 호남 고속철 조기 완공 등 SOC확충이 절실하다. 호남고속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다.



▲김홍주 (광주시관광협회장) =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시·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 지역 발전에 한 몫을 할 것이다.



▲박광선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비전 수립 노력이 절실하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육성 등도 시급한 과제다.



▲박국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 기업유치도 좋지만, 지역내 기업 육성에 중요하다. 지자체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 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



▲박지연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 회장) = 경제 회복을 위해선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



▲박현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 신규 투자 및 기업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각종 사업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송기진 (광주은행장) = 지역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에 나서야 한다. 또 적극적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양복완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 문턱을 낮추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오세철 (금호타이어 사장)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는 지자체의 노력 외에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윤형연 (광주·전남경총 사무국장) =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내 SOC에 대한 기반구축이 시급하다. 아울러 강성이미지로 활약 중인 노사관계를 건설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김경형 (인터세이브 대표) = 지역내 투자펀드를 조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문화컨텐츠 사업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승기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유치를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기업 유치는 지역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규모 성장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정환 (광주신세계 대표) = 건설·부품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경영난을 해소해야 유통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영복 (한국광산업협회 상임부회장) =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도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 경제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도입해야 한다.



▲정청신 (대한건설협회 광주시 회장) = 광주·전남의 경제 구조상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요구되고 있다. 수도권과 차별화된 부동산정책 시행과 SOC 확충 등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조남일 (기아 광주공장 공장장) =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역민들이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 등을 통해 제조업에 무한한 애정을 보여줬으면 한다.



▲조애옥 (한국에텍 대표) =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활성화해 주고, 금융권 역시 시설·운전자금에 대한 금리를 낮춰야 할 것이다.



▲채동석 (삼성광주전자 부서장)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지역 경제 발전의 근간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홍규무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육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가나다순>